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및 청년 조례·정책 검토와 방향 설정

김 용 현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kyhyun363@cni.re.kr

본 연구는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 수혜나이,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이행기의 지연, 국내외적인 연령기준 하향, 만혼화 현상 등으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상 연령기준을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로 재설정하고 결혼 지원 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

CONTENTS

<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계획 검토
3. 부여군 청년정책 확대 계획 검토 및 조언

요 약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과 함께 청년 **청년층의 낮은 혼인율과 만혼화** 등이 거론됨
-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결혼지원 사업이 필요함
- 실제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변화하였고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부여군은 청년의 비중이 낮고 (청년인구규모 충남 15개 시군중 14위) 향후 지역 소멸이 예측되는 군 단위지역의 하나로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 수혜나이,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회이행기의 지연, 국내외적인 연령기준 하향, 만혼화 현상 등으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상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여군은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개정하여 더 많은 관내 신혼부부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은 총액 500만원을 150,150,200만원씩 3년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하는 것과 5년간 100만원씩 동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함

0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18년 합계출산율이 '첫 0명대 진입'한 이래 2019년도에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함
 - 저출산 트렌드는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 흐름으로, 충청남도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1.11명임
 -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1.30이하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2040년까지 연평균 -0.31% 감소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성장둔화를 야기시키는 등 한국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된다면 700년 뒤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저출산현상 지속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노동력 공급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및 노동생산성 저하
 - 사회보장재정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위기 우려
 - 노동공급 감소, 저출산 하락,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 개인의 조세제도 증가 및 사회보장 혜택 축소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저하
 - 개인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 증가 및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원하는 자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삶의 질 저하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맞닿아 있는 복합적인 증층 구조의 문제임
-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1.7명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감하여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먼저, 청년들에게 출구없는 실업문제,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출산을 꺼리고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음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과 함께 청년층의 낮은 혼인율과 만혼화 등이 거론됨
-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결혼지원 사업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부여군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정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1.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필요성 : 출산 장려에서 결혼 장려로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저출산이 초래할 심각성을 강조하는 ‘국가적 ·애국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개인적 ·감성적’ 방향의 긍정적 가치관 조성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저출산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현재 젊은 세대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실정이며, 결혼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현실의 청년들은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함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보육관련 정책으로 출산율을 지원해 봐야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실효성이 저하됨.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넘어옴
-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부여군에서도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함
- 부여군이 계획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결혼식 비용과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거라 전망됨
-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 장려금 지원을 통해 부여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음

- 실제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음. 결혼장려금 정책을 실시하는 전국 자치단체는 15곳에 이룸
 - 전남영광·장흥·장성·해남군과 나주시, 전북순창·무주·장수·부안군, 경북 의성·봉화군 등 이고 충남도에서도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에서 실시하고 있음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전남·북 등 호남에서 경남·북, 충남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 사정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고 지급금액은 대부분 100만~500만원이나 장수군은 가장 많은 1000만원이나 됨

2. 청년지원 기본조례상의 연령요건 및 결혼지원 사업 금액 검토

1) 청년지원 기본조례상의 청년 연령 기준 검토

-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청년은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회인으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일컬어 왔음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은 충남도에 거주 생활하거나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지칭. 논산시를 포함한 충남도 시군의 경우, 청년을 18~39세로 규정
 -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을 일컫는 나이는 상이함

<표 1> 충남도 시군 및 타 시도 청년연령

시군	청년나이	시도	청년나이
부여군	18-39세	충남도	18-34세
천안시	18-39세	서울시	
보령시	18-45세	부산시	18-34세
아산시	18-34세	인천시	19-39세
서산시	18-39세	대구시	19-39세
논산시	18-39세	대전시	19-39세
계룡시	18-34세	광주시	19-39세
당진시	18-39세	강원도	18-34세
금산군	18-34세	충청북도	15-39세
서천군	18-39세	전라북도	18-39세
청양군	18-45세	전라남도	18-39세
홍성군	18-39세	경상북도	15-39세
예산군		경상남도	19-34세
태안군	18-39세	제주도	

자료 : 부여군 내부자료(2020)

● 타 지자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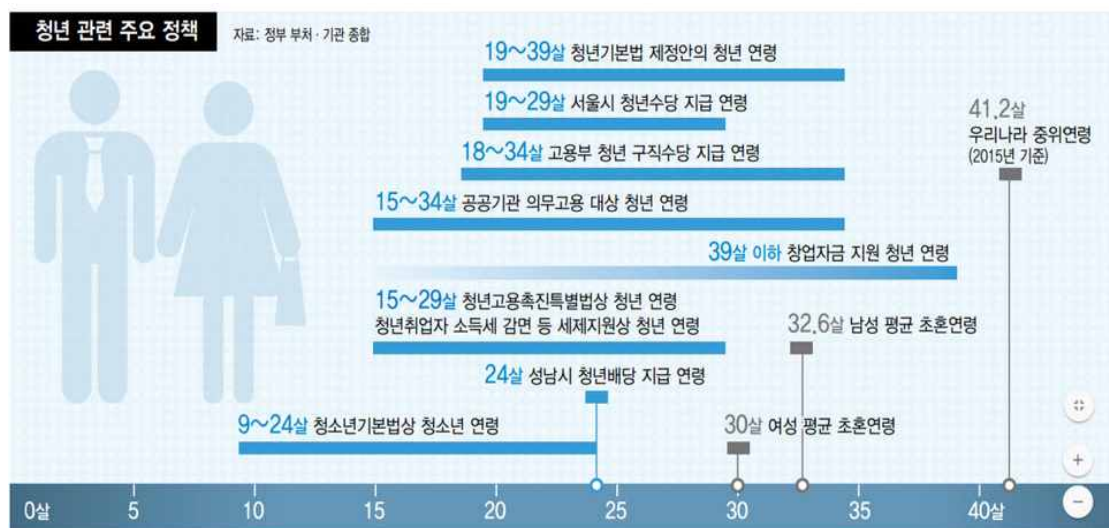
- (강원)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 18세 - 49세
- (강원)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 18세 - 45세
- (경북)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 19세 - 49세
- (경북)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 19세 - 49세
- (경남)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19세 - 55세
- (전남)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 만18세 - 49세
- (전남)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 만18세 - 만49세
- (전남)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 19세 - 49세

● 충청남도 시군 청년 기본 조례상의 연령기준 분석

- 18세 - 39세 : 부여, 천안 등 8개 지역이 적용하고 있음
- 18세 - 45세 : 보령, 청양 등 2개 지역이 적용하고 있음
- 18세 - 34세 : 금산, 아산, 계룡 등 3개 지역이 적용하고 있음

● 충남외 타 지역은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만19세 - 만49세로 하향하는 지역이 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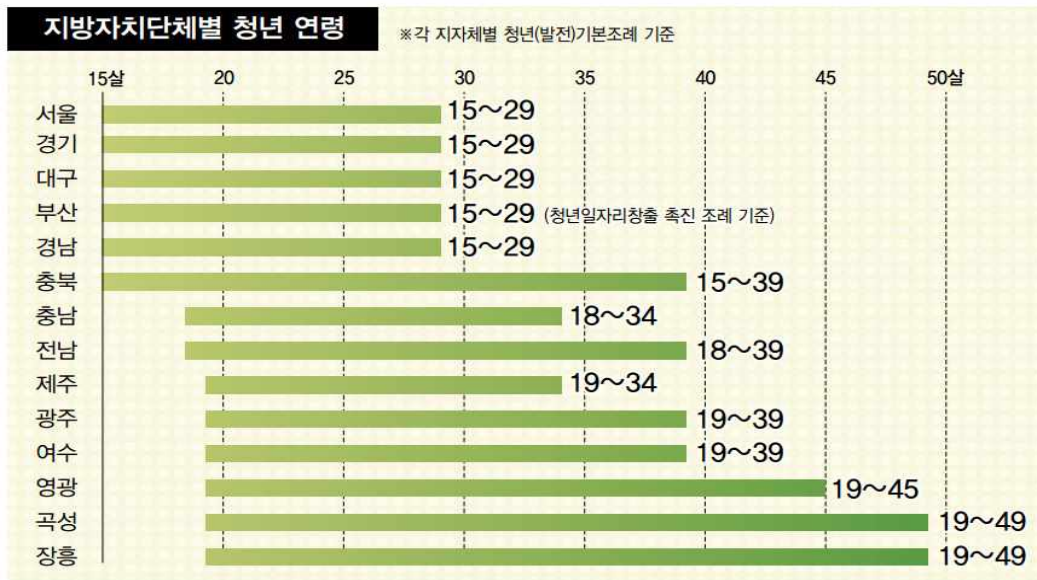
<표 2> 청년관련 주요 정책의 연령 요건



2)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상 청년의 나이 변경 검토

- 일반적으로 청년은 생애주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이행기’에 있음.
취업난에 한참 길어진 이행기가 전개되면서 청년 연령 기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음
 - 과거에는 늦어도 20대에 이행기가 마무리됐었으나 청년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데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역시 청년 나이를 바꾸고 있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표 2>처럼 41.2살이었음
 - 1990년대까지 20대에 머물렀던 중위연령은 2000년대 이후 30대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함
 - 이는 ‘청년’에 대한 기준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임.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46.5살, 미국과 중국은 각각 37.8살과 36.8살, 인도는 27.3살임(2015년 기준)
- 아래의 <그림 1> 과 같이 실제로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청년의 자격요건이 연장되는 경향이 있음
 - 전라남도의 곡성군과 장흥군은 2016년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청년 나이를 49살까지로 제정
 - 2015년 기준, 곡성군 인구 3만672명 중 19~49살은 9656명(31.5%)으로, 65살 이상 인구 9862명(32%)보다 적음
 - 이는 주민등록상 통계라서 다른 지역으로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간 이들을 빼면 실 거주 청년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장흥군, 곡성군과 사정이 유사한 영암군, 완도군도 청년 연령을 만19~49살로 하향조정하였음

<그림 1>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연령



자료 : 한겨레 2016.0919 일자,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 나라 바깥에서도 청년들의 처지가 열악할수록 연령대를 높게 잡는 추세가 있음

- 유엔은 최근 획기적인 청년기준을 제시. 1950년 노인기준을 65세로 잡았으나, 최근 산업화의 진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인(Old)을 80세 이상으로 제안

<표 3> 각종 법령 및 법규의 청년 연령

법령 및 법규	연령의 정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5~29세 이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15~29세 이하
청년기본법(안)	19~34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18~34세 이하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등 충남도 시군조례	18~39세 이하
남해, 영광, 무안군 등 시군조례	만19~45세 이하
영암, 완도, 함평, 장흥 시군조례	만19~49세 이하
* 유엔 연령구분(UN's New Age Classification)	18~65세 이하

자료 : 2019년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충남연구원)

● 현행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상의 청년의 나이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사회이행기의 지연, 국내외적인 연령기준 하향 등으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상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부여군은 65세 이상 인구(22,274명)에 비하여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인구비율이 18,077명으로 상기의 곡성군과 보다는 편차가 크므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의 청년기준을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3)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수혜 나이 검토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지급 대상자의 연령 요건을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나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부 중 한명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고 있음. 이 같은 지자체는 순창군, 고흥군, 옥천군, 영월군, 나주시, 장수군, 성주군 등임
- 타 지자체 사례 이외에 사회분위기상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점차 만혼화 되고 있는 것도 청년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하는 사유가 됨
-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20~24세)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상승하던 30대 초반의 혼인율마저 2010년대에 들어서며 정체되는 추세임
 -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25세~29세)의 혼인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30대 초반의 혼인율은 상승 곡면을 보임.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20대 후반의 혼인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30대 초반의 상승세는 사실상 소멸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낮은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낮아지고, 높은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이때 2010년대 중반부터는 높은 연령대의 상승세마저 소멸되고 있어 혼인에 대한 적극성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연구원은 이와 같은 변화가 출생 연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24~35세까지 연령별 혼인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1983년생(현재 37세)까지는 혼인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이 발견되지만, 1984년생(현재 36세)부터는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견됨 (보험연구원보고서, 2000)

- 남성과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다름에도 이전 세대와 다른 혼인 성향이 1984년생 이후 남녀에게 동일하게 나타남. 이는 특정 세대가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느끼며 다른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이나 행위 양식을 갖는 코호트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됨
- 부여군 결혼장려 지원금 사업의 수혜기준을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상의 ‘청년’으로 제한하고 결혼장려 지원금 사업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4)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 검토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100만~500만원이나 장수군은 가장 많은 1000만원이나 됨
 - 함평군은 총 500만원을 첫 회 300만원, 향후 2년간 지원금 100만원분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임
 - 화동군은 총 500만원 지원으로, 결혼 첫 해 200만원, 이어 3년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5년간 매년 200만원 지급으로 최대 1000만원 지원하고 있음
- 부여군은 대부분 지자체처럼 총 지원금액은 500백 만원으로 하되 결혼장려지원금을 수혜하고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연간 나누어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1안 : 총지급액 500백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150만원+150만원+200만원)
- 제2안 : 총지급액 500백만원을 5년간 각각 100만원씩 동일 지급하는 방안
 - 초혼은 물론, 재혼부부도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초혼인 경우만 지급하는 것은 재혼부부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음
 - 부부 중 한 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1. 현행 부여군 청년정책

-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지역마다 청년정책의 분야가 다름. 5년 마다 수립하는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6)은 참여, 일자리, 공동체, 문화·삶 등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아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17)은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와 여가, 참여와 권리 등 5개 분야로 설정
- 서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로 설정
- 당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17)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로 설정
-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지역마다 분야가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형태임. 고용, 문화, 복지, 교육, 참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함
- 2018년에 수립된 부여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여군 청년정책의 사업분야는 크게 4개 분야, ‘설자리’(제도기반참여), ‘일자리’(취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커뮤니티)임
- 부여군의 명시적 청년대상사업은 설자리(4), 일자리(7), 살자리(3), 놀자리(2)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임

1) 설자리 : 청년 지원 인프라 조성 및 참여·소통 확대

<표 4> 부여군 청년정책 '설자리' 추진사업현황

청년정책		추진내용
행정 기 반 마 련	청년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상	○ 청년지원 협의체 설치 운영(계획중)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여성·청년지원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여성·청년 단체, 의회 추천, 관련 활동 경험자를 위촉직으로 선정하여 운영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음
	「부여군 청년 기본 조례」 (2016. 8. 12. 공포)	○ 목적: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내용: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분야별 청년활동 지원 등
	3133 인구청년 정책추진단	○ 민관이 참여한 인구청년정책 중 3개의 단기과제, 13개 중장기과제, 3대 실천운동을 숫자화 함 ○ 청년, 청소년, 아동,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한 13개 분야 35개 사업과제에 대한 발표보고회 진행('18. 4. 5.)
추 진 사 업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 기능: 청년문제 의제화 및 정기적 소통 창구 역할(청년정책 의견수렴체) ○ 구성: 전문가 및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대학생, 직장인, 농업인, 워킹맘 등) ○ 운영내용 - 부여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식 및 원탁토론회 개최(2018. 3. 21.) - 부여군 청년정책 방향 설명 및 원탁토론 방식의 의견수렴

자료 : 2018 부여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

2) 일자리 :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표 5> 부여군 청년정책 '일자리' 추진사업현황

청년정책		추진내용
추 진 사 업	「부여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청년창업 점포 육성(청년몰) 및 상생커뮤니티 조성	○ 부여중앙시장 및 부여시장에 청년점포를 육성하여 다양한 청년 창업 기회를 마련 - 청년점포 육성 교육, 청년점포 창업 지원 ○ 부여중앙시장에 지역 협력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청년 가이드 육성, 청년 공예인 연계 상품 개발 등 새로운 청년 사업을 추진
	청년농부 플랫폼 조성	○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 청년지원, 영농정착 지원 - 2018년 예산 :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교육(4,320만원), 청년 청년 안정 지원(2,88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7,290만원)
	청년 창업교육	○ 혁신적 아이디어와 사업실행 가능성을 지닌 청년창업희망자에게 창업자교육, 컨설팅, 창업비용 등을 지원
	2030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침 자격요건 기준에 충족 시 세대 당 1,000만원 지원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 참여	○ 지자체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상담 및 정보 제공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기존의 농업 공모사업 기준은 농업경영인(대농)에 유리하게 되어있음 ○ 청년 창업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여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청년희망키움통장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세 대상)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자료 : 2018 부여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

3) 살자리 : 청년 주거 및 양육 환경 업그레이드

<표 6> 부여군 청년정책 ‘살자리’ 추진사업현황

청년정책		추진내용
추진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설 추진	○ 홍산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및 운영 예정(2019년) - 홍산면 북촌리 연면적 264㎡(약 80평),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부부 및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 -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 서비스와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 등 양육자와 아동의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며, 정부지원은 연 600시간 지원
	여성 친화도시 선정 및 아동 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수립	○ 사업주체: 교대 출신 경력단절 여성 등이 사회적 기업 설립 ○ 사업내용: 저녁시간 및 방학 등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사각지대 해소(시간제 돌봄, 방과 후 마을 학교 강사 파견) ○ 사회적기업 유형 :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자 채용 ○ 지원방안: 종합복지타운, 가족문화센터 등에 시설 특별 임대 ※ 맞벌이 가정 이용 바우처 지원(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 사용)

자료 : 2018 부여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

4) 놀자리 : 차별화된 청년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표 7> 부여군 청년정책 ‘살자리’ 추진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청년정책		추진내용
추진사업	청년공예 K-클러스터 구축 (사업추진 자료요청 필요)	○ 주민주도형 창조산업 활성화와 문화예술 중심 전략을 통하여 부여읍 상권 활성화 및 청년창업 등을 확대하고자 함 ○ 지역 스토리와 역사문화자원에 기반한 장소성 회복과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 부여함으로써 구도심지와 차별성을 부각함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년센터 내 조성)	○ 조성시설 : 카페형 커뮤니티 홀, 스터디 룸, 문화강연장, 세미나실 ○ 운영 프로그램 - 소셜다이닝, 미니 프리마켓·경매, 스스로 강연(경험·노하우 관련) 등 - 자율적으로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 ○ 기대효과 : 자율적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증진

자료 : 2018 부여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

2. 부여군 청년정책의 평가

- 지금까지 부여군의 청년정책은 군 단위 특성에 맞게 주로농업 분야 일자리 정책에 큰 비중이 있음
-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외부유출을 막고 청년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음
 - 부여군은 충남도 15개 시군중 청년 인구 규모가 14위이고 전체 인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음
- 전체적으로 부여군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의 현안은 일자리/주거/문화 부분으로 확인되나 문화와 복지 같은 청년 문화의 형성과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향후의 청년정책은 타 지역으로의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함. 청년인구 유출 → 지역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 가속화 → 지역 활력 감소 → 청년인구 유출 규모 확대라는 부정적 순환의 발생
- 부여군은 낮은 규모의 청년 인구도 문제이지만 인구구성도 주로 남성이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지역의 젊은 여성에게 부여군 청년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음
 - 비수도권 청년인구 중 남성보다 여성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큼. 지역에서 가임기연령 여성(20~39세)의 빠른 감소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존속을 위협할 것으로 보임
- 부여군에 거주하는 많지 않은 수의 젊은 여성이 타 지역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부여군 젊은 여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중심의 일자리 제공과 병행하여 청년층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예술, 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서비스 산업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처럼 젊은 여성이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결혼지원-출산지원-육아 지원-양성평등 정책이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함
 - 인프라 측면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결론적으로 부여군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3. '20~'25 부여군 인구·청년정책의 평가

1) 20~'25 부여군 인구·청년정책 기본 구상(청년친화도시)

<표 7> '20~'25 부여군 인구·청년정책 기본 구상

비전	청년이 살고 싶은 고장, 부여
미션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부여 청년의 삶이 보장되는 부여 청년이 함께 디자인 하는 부여
설자리	부여군 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를 위한 제반 조건 조성
일자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마련 및 구직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살자리	청년들의 보금자리 확대 및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지역 만들기
놀자리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부여 청년 문화 융성 사업

[거점]

[분점]

부여군 청년센터 (운영 : 중간지원조직)	각 읍면 청년 조직
	부여군 내 고등학교(5), 대학교(1)
	각 청년단체 및 청년 동아리 등

2) 추진전략

단 계 구 분	추진 내용
준비, 기초 다짐 (현재 ~ 20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례 개정 / 부여군 청년센터 이전·확장 ● 부여군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Bottom up) 청년정책 의견수렴[데이터 베이스(DB)] ● 거버넌스 정립 : 청년정책조정위, 청년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 시책 발굴 : 성과소, 부여군민 제안공모
시행, 운영 (2021~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청년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중심 : 청년창업 지원,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산업·학교·민간 등과 함께 청년들의 정주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만들기, 청년창업지원 확대 등
자립, 안정화 (2023~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중심 거점화 ● 청년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 청년정책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자료 : '20~'25부여군 인구·청년정책 확대 추진 계획(안)(2020)

- ‘20~’25 부여군 인구·청년정책의 비전인 “청년이 살고 싶은 고장, 부여”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됨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부여군 청년센터’의 거점 운영과 각 읍면 청년 조직의 분점 운영도 청년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여군에 청년들이 교류하기에 좋은 정책임
- ‘20~’25 부여군 인구·청년정책의 기본구상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결혼친화도시’ 조례 제정도 고려해 볼 만한 야심찬 사업임
- ‘결혼친화도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함. 세부사업으로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 공공시설의 예식장 사용, 결혼예비학교 개설, 평등한 명절 문화 확산, 찾아가는 결혼·가족 교육 등을 들 수 있음
 - 인천시는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고 대한민국 제일의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상을 발표(경인일보, 2018)
 - 인천시는 76억원을 들여 ‘결혼인식 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등 3단계 9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 대전 서구는 2020년 현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치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참 고 자 료

부여군. 2018. 부여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부여군. 2020. '20~'25부여군 인구·청년정책 확대 추진 계획(안).

이태열 . 2020. 최근 국제혼인 증가의 특징. 보험연구원.

충남연구원. 2019.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

경인일보. 2018.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8월 30일자)

한겨레신문. 2016.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9월19일자)